



주간 통일정세

2012-45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보름 만에 공개석상 등장(종합)(10/29, 조선중앙통신 등)**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보름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이 29일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29일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창립 60돌을 맞아 이 학교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 제막식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해 연설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동상 제막식장에 나오자 "(제막식) 전체 참가자들이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은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 올렸다"고 전함.

- **北 리설주 재등장... '부부동반' 행보 재개(종합)(10/30, 조선중앙통신)**
 - 한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리설주가 50여 일 만에 다시 공식석상에 등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전함.
 - 이 통신은 지난 29일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창립 60돌을 기념해 열린 모란봉악단 공연에 리설주가 남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함께 참석했다고 밝힘.

- **北 김정은, 쿠바에 허리케인 피해 위로 전문(10/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0일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허리케인 '샌디(Sandy)' 피해를 위로하는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이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카스트로 의장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나는 최근 귀국(쿠바)의 동부 주들이 태풍으로 인해 인명 피해와 많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해 쿠바 정부와 인민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보낸다"고 밝힘.
 - 김 제1위원장은 이어 "나는 당신의 영도 밑에 쿠바 당과 정부와 인민이 이번 자연재해의 후과(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임.

- **北 내각 금속공업상도 교체(10/3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은 체제 들어 내각의 주요인사들이 속속 교체되고 있는 가운데 내각의 금속공업상도 교체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고 조선중앙통



- 신이 밝힘.
- 이 통신은 이날 함경북도에 있는 북한 최대의 제철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열간압연공정의 현대화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관련 시설 준공식에 한효연 금속공업상이 참석해 준공사를 했다고 보도함.
- **北 한광복 부총리, 당 부장에 임명(11/1, 노동신문)**
- 북한의 한광복 내각 부총리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함.
 - 이 신문은 이날 전국보건부문 일꾼회의가 전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참석자 가운데 한광복을 '당 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소개했다고 전함.
- **김정은 "당과 수령에 충실치 못한 군인 필요없어"(11/2, 조선중앙TV)**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과 수령에 충실하지 못한 군인은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고 조선중앙TV가 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열린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식에서 한 연설에서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군사가 다운 기질이 있고 작전전술에 능하다고 해도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밝힘.
 - 조선중앙TV는 지난달 30일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창립 60돌 성대히 기념'이라는 제목의 기록영화에서 김 제1위원장의 연설을 약 12분 분량으로 편집해 내보냈는데, 그는 연설에서 "역사적 경험은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지 못한 군인은 혁명군대 군인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없으며 나중에는 혁명의 배신자로 굴러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총진 혁명가의 근본징표"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또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최고사령관과 뜻과 정을 영원히 같이 하며 우리 당만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신념의 인간, 양심의 인간, 의리의 인간들로 준비시켜야 한다"며 "인민군 지휘성원들은 누구보다도 신념이 투철하고 양심이 순결해야 한다"고 지적함.
- **北김정은, 김정일보다 공개활동 활발(1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개활동 횟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전문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2일 보도함.
 - 이에 따르면 미국의 북한 전문사이트 NK뉴스의 루크 허먼 선임연구원은 이 사이트에 게재한 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9개월 반 동안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개활동 횟수가 총 118회라고 밝혔는데, 이는 그가 지난해 12월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을 참배했던 횟수까지 포함한 수치임.



- 반면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인 1994년 7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2년6개월 동안 김정일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88회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 北 내각 인사, 노동당 속속 진입(11/4, 연합뉴스)

- 북한 내각에서 경제 분야를 담당했던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노동당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고 4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매체는 지난 1일 전국보건부문 일꾼회의가 전날 개최된 소식을 전하며 참석자 가운데 한광복을 '당 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소개, 내각에서 금속·기계·정보기술(IT) 등을 다뤘던 한광복이 새로 당직을 맡았음을 확인함.
- 박봉주는 2007년 4월 총리직에서 해임된 뒤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좌천됐다가 2010년 8월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전격 복권됐고 올해 4월 김정희 당비서의 비통을 이어받아 경공업 부장에 올랐.
- 광범기 역시 1998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1년 넘게 부총리를 역임하다가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를 거쳐 올해 4월 당비서 겸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산위원장 자리까지 꺾참.



■ 김정은동향

- 10/29, 김일성父子 동상 제막식, 10.29 김정은 黨 제1비서 참가下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진행(10.29,중통·중·평방)
 - 최룡해, 현영철, 김정각, 장성택, 김영춘, 리용무, 현철해, 오극렬 등 참가
 - 동상 제막 : 최룡해, 현영철, 김정각, 장성택, 김영춘, 려춘석(대학총장)
- 10/29, 김정은 黨 제1비서, 10.29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교직원들과 기념촬영(10.29,중통·중·평방)
 - 최룡해, 현영철, 김정각, 장성택, 리용무, 김영춘,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오극렬, 주규창, 려춘석, 장동운 등 참가
- 10/29, 김정은·리설주, 10.29 평양시민들과 제12차 인민체육대회 체육단부문 4.25팀과 선봉팀의 남자축구 결승경기 관람 및 제30차 올림픽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들과 감독들을 만나 기념촬영(10.30,중통·중방)
 - 최룡해, 현영철, 김경희, 장성택, 김양건, 김평해, 주규창, 문경덕 등 함께 관람
- 10/31, 김정은 黨 제1비서, 10.31 故 리도익(김일성상계관이며 인민 예술가인 前 백두산창작단 미술가) 빈소에 화환 전달(10.31,중통·중방)
- 11/1, 김정은 黨 제1비서, 여러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교직원·학생들·총련 대표단·강습생들이 올린 편지에 대한 '친필' 전달(11.1,중통)
- 11/4,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설된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시찰 및 군인건설자들에게 「감사」 전달(11.4,중통·중·평방)
 -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김양건(黨 비서), 김병호·박춘홍(黨 부부장) 등 동행 및 최창식(보건상) 등 현지 영접
- 김정은 黨 제1비서, 준공을 앞둔 류경원·인민야외빙상장·롤라스케이트이장(군인건설자들에게 「감사」 전달) 시찰(11.4,중통·중·평방)
 -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김양건(黨 비서), 리영수(黨 부장), 김병호·량청송·박춘홍(黨 부부장) 등 동행 및 리종무(체육상)·리주봉(체육성 黨책임비서) 등 현지 영접



■ 기타 (대내 정치)

- 김영일(黨비서), 10.29 체히-모라바공산당 대표단과 담화 및 체히-모라바공산당 중앙위 위원장이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보내는 선물 접수(10.29,중통·중방)
- 최룡해 총정치국장,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정형 현지요해(10.30,중통)
- 최영림 내각총리, 김책공업종합대학 현지 요해(10.31,중통·평방)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열간압연공정 현대화 준공식, 10.31 한효연(금속공업상)·오수용(咸北道黨 책임비서) 등 참가下 진행(10.31,중통·중방)
-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 11.4 평양에서 진행(11.4,중통·중·평방)
 - '국가체육지도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국 '결정서' 채택 및 성원들 임명
 - '국가체육지도위'는 체육의 대중화·생활화 사업, 체육과학기술의 세계적 수준으로의 발전과 선수 후비 양성사업, 선수들의 훈련과 국제경기를 위한 국가종합훈련 강화사업, 국내체육경기 활성화 사업 등 체육사업 전반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맡아하게 된다고 소개
 - △장성택(위원장), △로두철·최부일·리영수(부위원장), △장선강(서기장),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조연준, 주규창, 김용진, 박봉주, 한광상, 리종무, 오금철, 전용남, 현상주, 리명길, 로성실, 김동일, 김영호, 김승두, 장철, 최광진, 안정수, 조영철, 전길수, 리룡남, 리성호, 문응조, 김성의, 차희림(위원)

나. 경제

● 北 "경공업부문 과학화·현대화 추진" 선전(10/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경공업 부문에서 생산의 과학화·현대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선전하며 여러 생산단위의 성과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이 통신은 29일 '경공업 발전을 추동하는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경공업부문 근로자들의 열의 속에 이 부문에서 생산의 과학화,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전함.
- 이어, 통신은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는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여 전반적 생산공정에 대한 통합자동화 체계를 실현했다"고 덧붙임.



다. 군사

- **北, 10년 만에 軍 청년동맹 초급간부대회 개최(10/31, 조선중앙통신 등)**
 - 북한에서 군대 내 청년동맹 초급간부대회가 10년 만에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매체가 31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인민군 중대 청년동맹 초급단체위원장 대회가 31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며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엄향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인민군위원회 위원장, 인민무력부 일꾼 등이 대회에 참석했다고 보도함.

라. 사회·문화

- **평양공기 서울보다 나쁘다(11/1, 미국의소리(VOA))**
 - 유엔환경계획(UNEP)이 최근 보고서에서 평양 공기가 서울보다 나쁜 것으로 평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전함.
 - UNEP가 북한 국토환경보호성의 협조를 받아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조사를 벌여 완성한 '북한의 환경과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평양의 연평균 아황산가스 농도는 0.009ppm으로 같은 해 서울(0.006ppm)보다 높았음.
 - 평양의 연간 먼지 발생량도 200g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0년대 초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광주광역시시의 먼지 발생량은 평양의 절반 수준인 120g이었음.
- **北 "민물고기 양식 과학화 성과" 선전(10/3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1일 민물고기 양식사업의 과학화로 민물고기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선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 통신은 이날 "평양시 삼석중어(치어)사업소는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새끼 물고기의 사름률(생존율)을 3배로 높였고, 황해북도 연탄 중어사업소에서는 전기를 쓰지 않고 수질이 좋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알깨우기장(부화장)을 꾸려놓고 그 실수률(부화율)을 올리고 있다"고 전함.
 - 또한, 평양에 있는 대동강자리공장에서 양식장 소독과 수질검사 등 양식에 필요한 조건을 빈틈없이 갖춰 성장률을 높이고 있고, 평안북도 염주청년양어장과 룡천중어사업소 등에서는 '룡정어(가죽 잉어)'를 잘 부화시켜 시·군 중어사업소와 공장·기업소·협동농장의 양어장에 많이 보내줬다고 소개함.
- **北 말라리아 감염자 지속 감소(11/3, 자유아시아방송(RFA))**
 - 현재 북한의 말라리아 감염자는 1만3천520명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인용해 3일 전함.
 - 국제구호단체인 '롤백말라리아(Roll Back Malaria)'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전날 발표한 '2012 세계 말라리아 퇴치보고서'에서 이같이 밝



했으며 올해에는 북한의 말라리아 감염자 수가 보고되지 않아 이 숫자는 지난해 발표 때와 같은 수치라고 VOA는 전함.

● **北, 쌀·밀 등 곡물생산량 40년前 수준(11/4, 연합뉴스)**

- 북한이 한 해 생산하는 각종 곡물생산량이 197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 한 명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곡물량은 40년 전보다 오히려 40%나 줄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4일 통계청이 최근 '북한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식량농업기구(FAO)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곡물생산량(쌀·밀·보리·옥수수 등)은 2010년 452만t으로 1970년대 초반 생산량과 비슷함.
-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자료 집계가 시작된 1961년 358만t을 기록한 이후 300만~400만t 사이를 오르내렸고 1969년 437만t, 1970년 436만t, 1971년 449만t 등으로 1970년대 초 400만대를 기록함.

● **北김정은, 주민편의시설 시찰...'민생행보' 재개(11/4, 조선중앙통신)**

- 지난달 29일 보름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수일 만에 평양시내 의료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을 둘러보며 '민생행보'를 재개함.
-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김 제1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를 시찰했다고 4일 밝힘.
-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김양건 당비서, 김병호·박춘홍 당 중앙위 부부장이 중앙연구소 시찰에 동행함.

● **北 국가체육지도위 발족...위원장에 장성택(1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함.
- 결정서는 '국가체육지도위에 대해 "체육 대중화, 체육과학기술 발전, 체육인재 양성, 체육사업 지원 등 전반적인 체육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게 된다"고 소개하고 도·시·군과 군경기관에 설치된다고 소개함.
- 첫 체육지도위원장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은 로두철 내각 부총리·최부일 부총참모장·리영수 당 근로단체 부장이 각각 임명됐고 김기남 당비서 등 32명이 체육지도위원에 이름을 올림.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김일성대, 中 지린대와 교류 강화(10/30, 연합뉴스)**
 -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이 중국 동북 지역의 명문 국립대인 지린(吉林)대와 학과 인재, 학술 분야 교류를 강화하고 나섰다고 지린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용하여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함.
 - 30일 지린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일성대 당위원회 김태희 서기를 단장으로 한 북측 대표단은 지난 23~28일 지린성 창춘(長春)에 있는 지린대를 방문해 토론회와 교내 시찰, 양 대학 간 교류 확대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함.
 - 지린대측은 이번 회의에서 양 대학이 과학 연구와 학술 교류, 교원 상호 방문, 대학원생 양성 등의 협력사업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 **英, 작년 대북 유엔긴급구호기금 22% 지원(10/31, 미국의소리(VOA))**
 - 지난해 북한에 지원된 유엔의 중앙긴급구호기금중 22%를 영국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영국 상원의 린지 노스 오버 국제개발 담당 대변인을 인용해 31일 보도함.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지난해 2천500만 달러, 올 3월 추가로 1천 1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한 바 있음.
 - 노스오버 대변인은 북한이 거주지역, 출신성분 등을 기준으로 주민을 차별하고 있다고 밝히고 영국은 유엔총회,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이런 문제를 정기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함.
- **北노동신문, 美위안부기림비 거론하며 日 비난(10/31, 노동신문)**
 - 북한이 미국에 설치된 위안부 기림비를 거론하며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고 노동신문이 31일 보도함.
 - 이 신문은 31일 개인필명의 글에서 "일본의 둘도 없는 동맹국인 미국 땅에 일제의 성 노예 죄행을 고발하는 비석이 연이어 세워지는 것은 과거 범죄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당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함.
 - 또한 "얼마 전 미국 동부에 위치한 뉴저지주의 한 도시에서 과거 일본군 성 노예 범죄와 관련한 비석을 세울 데 대한 문제가 결정됐다"며 "지금 이런 움직임은 워싱턴과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각 곳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함.
- **北-UAE 항공협정 가서명.. "비준 절차 남아"(11/2,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중동의 허브 아랍에미리트(UAE)와 항공협정에 가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함.

- 익명을 요구한 현지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UAE 민간항공청(GCAA)과 북한 당국이 지난 달 15일 항공협정에 가서명했다"면서 "정식 체결을 위해 양국 정부의 비준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안다"고 밝힘.

● **노르웨이, 北취약계층 위해 87만弗 추가지원(1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노르웨이 정부가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지원을 위해 87만 달러를 추가지원키로 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함.
- 이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노르웨이가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 87만 2천600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최근 약속했다며 기존 기부금을 포함하면 노르웨이의 전체 대북 지원금은 170만 달러 규모라고 밝힘.
- WFP는 이 기부금으로 옥수수, 식용유를 구입한 뒤 WFP가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량가공공장에서 영양강화과자를 만들어 북한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함.

● **작년 방북 중국인 19만 명...2년새 2배로 증가(11/3, 미국의소리(VOA))**

-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의 수는 19만 명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중국 국가여유국의 통계를 인용해 3일 전함.
- 중국 국가여유국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11년 여유업 통계공보'에서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19만3천900명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2010년(13만1천100명)에 비해 47.9% 증가한 것이며 2009년(9만6천100명)의 2배를 넘는 규모임.
- 이 숫자는 사업, 친지 방문, 관광 등 목적에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전체 중국인을 집계한 것이고, 이처럼 방북 중국인이 증가한 것은 중국인의 북한 관광이 활성화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 상임위원장, 10.30 駐北 핀란드 대사(마띠 헤이끼 헤이모넨) 신임장 접수(10.30, 중통)
- 박의춘 외무상, 10.30 訪北 시리아 정부경제대표단과 담화(10.30, 중통)
- 중앙통신사 논평(10.30), 日 자민당 총재(아베 신조)와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관련 '군국주의 재침야망에 환장한 망동, 극우세력이 활개칠수록 일본의 전도는 더욱 암담해 질 것'이라고 비난(10.30, 중통/군국주의 광신자들이 활개치는 일본)
- 짐바브웨 대통령, 10.23 허중 駐쿠웨이트 北 대사(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세계에너지연방회의 참가) 접견(10.31, 중방·중통)
- 美 국무성 부장관 '번즈'의 對北발언(핵야욕과 미사일계획이 동북아지역 안정과 평화에 위협 등) 관련 '우리(北)의 핵역세력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대시정책 철회' 주장(11.1, 중통·노동신문·평방/호전세력의 황당무계한 위협타령)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NLL서 한미훈련 강화는 위험한 흥계"(1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일 한미 양국이 제44차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재확인한 것을 "위협천만한 흥계"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 통신은 이날 "이것은 군사적 충돌의 불씨를 안고 있는 서해에서 북침도발의 도수를 더욱 높여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추악한 공모결탁"이라며 "'북방한계선'은 미제침략군이 정전협정과 배치되게 우리의 신성한 영해에 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유령선"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힘.
 - 또 '북방한계선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남한 당국이 이미 인정한 바 있다며 "최근 남조선의 정계, 학계, 사회계도 '북방한계선'은 남북이 합의한 해상경계선이 아니고 정전협정에도 없는 비법선으로서 분쟁의 씨앗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함.
 - 이어, "첨예한 군사적 긴장이 흐르는 서해 5개 섬과 주변수역에서 외세와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달겠다는 노골적인 전쟁선포나 다름없다"며 "군사적 공모결탁이 초래할 엄청난 후과(결과)에 대해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전함.



- **北 "南, 정상회담 내용 왜곡·날조"(1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 "괴뢰보수패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문제까지 왜곡·날조해 민심과 여론을 오도해보려 하고 있다"고 2일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에서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이전 정권에서 북과 NLL을 논의했다는 그 무슨 대화록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며 "이것은 곧 북남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고 그것을 뒤집어엮기 위한 가소로운 술책"이라고 비난함.
 - 조평통 대변인은 또 "선거 때마다 '북풍'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괴뢰보수패당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2010년 6월 지방 선거 때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고,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선거와 올 4월 국회의원 선거 때도 북남관계를 고의로 긴장시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함.
 - 대변인은 "우리를 걸고 북풍을 조작하는 데 대해 우리가 할 말을 하는 것은 당사자로서의 응당한 권리행사"라고 덧붙임.

- **北 "南, 정상회담 내용 왜곡·날조"(1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 "괴뢰보수패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문제까지 왜곡·날조해 민심과 여론을 오도해보려 하고 있다"고 2일 주장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에서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이전 정권에서 북과 NLL을 논의했다는 그 무슨 대화록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며 "이것은 곧 북남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고 그것을 뒤집어엮기 위한 가소로운 술책"이라고 비난함.
 - 조평통 대변인은 또 "선거 때마다 '북풍'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괴뢰보수패당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2010년 6월 지방 선거 때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고,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선거와 올 4월 국회의원 선거 때도 북남관계를 고의로 긴장시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함.

- **北 조평통 "南 정권교체해야"...선거개입 시도(11/3, 연합뉴스)**
 - 북한이 3일 "남조선 각 계층은 새누리당의 재집권 기도(시도)를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대선을 계기로 정권교체를 기어이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남한의 대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선거개입 의도를 드러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새누리당은 민족의 재앙거리이고 온갖 불행의 화근"이라면서 "보수 골동품의 집합체인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남조선 사회와 북남관계는 이명박 정권 때와 똑같이 될 뿐 아니라 유신독재가 부활하며, 초래될 것은 파쇼적 탄압과 전쟁뿐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



양통신이 보도함.

- 조평통은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과 허평환 국민행복당 대표의 새누리당 입당 등을 거론하며 "최근 새누리당이 보수 본색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보수세력의 결속을 강화한다"고 비난함.

■ 기타 (대남)

- 통일부장관의 訪中(10.28~30) 對北 발언(10.29, 北이 변화를 위한 용기를 내기 바란다 등)에 대해 "주제넘은 낯두리로 단호히 타매한다"고 신랄히 비난(10.31, 중통 논평/하수인의 훈수없는 나발)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韓美 당국이 운운하는 협력과 공동대응이란 친미보수세력을 대결어로 떠밀기 위한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이며 북풍의 여론화라며 '대선 형세에 모략과 도발이 필요하여 합동 군사연습·중북세력척결을 떠들며 진보세력에 대해 탄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왜곡 주장(11.1, 중통/대선을 겨냥한 불순한 도발공조)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호국훈련' 실시 관련 '韓美호전광들이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책동으로 전쟁의 도화선에 끝끝내 불을 단다면 전면적인 보복대응과 무자비한 반공격으로 멸살되고야 말 것'이라고 지속 위협(11.1, 중통/호국훈련의 침략적 정체는 가리울 수 없다)
-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문 대답(11.2)】 보수패당의 北風 조작책동(前 정권의 NLL관련 '대화록'을 거론하며 영토주권포기세력으로 선동)은 '부정부패사건에 쏠린 여론과 민주개혁세력 지지 민심을 차단해 불리한 大選정세를 역전시켜보려는 책동'이라고 비난(11.2, 중통)
- 대통령의 對北발언(10.18, 연평도 순시) 및 '미사일정책선언'(10.7) 등을 지속 거론하며 "이○○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은 그들 자신의 종국적 파멸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비난(11.3, 중통·노동신문·중방/대결전쟁책동은 파멸의 길이다)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미·북 관계

● 北 "NLL서 한미훈련 강화는 위험한 흥계"(11/1, 연합뉴스)

- 북한은 1일 한미 양국이 제44차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재확인한 것을 "위험천만한 흥계"라고 비난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이것은 군사적 충돌의 불씨를 안고 있는 서해에서 북침도발의 도수를 더욱 높여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추악한 공모 결탁"이라며 "북방한계선은 미제침략군이 정전협정과 배치되게 우리의 신성한 영해에 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유령선"이라고 주장함.
- 또 '북방한계선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남한 당국이 이미 인정한 바 있다며 "최근 남조선의 정계, 학계, 사회계도 '북방한계선'은 남북이 합의한 해상경계선이 아니고 정전협정에도 없는 비법선으로서 분쟁의 씨앗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함.
- 중앙통신은 "참여한 군사적 긴장이 흐르는 서해 5개 섬과 주변수역에서 외세와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달겠다는 노골적인 전쟁선 포나 다름없다"며 "군사적 공모결탁이 초래할 엄청난 후과(결과)에 대해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함.

나. 중·북 관계

● 작년 방북 중국인 19만 명...2년새 2배로 증가(11/3, 연합뉴스)

-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의 수는 19만 명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중국 국가여유국의 통계를 인용해 3일 전함.
- 중국 국가여유국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11년 여유업 통계공보'에서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19만3천900명이라고 밝힘. 이는 2010년(13만1천100명)에 비해 47.9% 증가한 것이며 2009년(9만6천100명)의 2배를 넘는 규모임. 이 숫자는 사업, 친지 방문, 관광 등 목적에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전체 중국인을 집계한 것임. 이처럼 방북 중국인이 증가한 것은 중국인의 북한 관광이 활성화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 당국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지난해 북한은 평양~상하이, 평양~하얼빈, 평양~시안 국제항로를 개설했으며 전세기에 의한 하얼빈과 금강산 간 국제관광도 시작함. 러시



아 해상을 통한 라선-금강산 시범 국제관광이 진행됐고, 칠보산 관광열차 개통식도 거행되는 등 다양한 관광로와 교통수단을 개발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음.

다. 일·북 관계

● 北노동신문, 美위안부 기림비 거론하며 日 비난(10/31, 연합뉴스)

- 북한이 미국에 설치된 위안부 기림비를 거론하며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사죄할 것을 촉구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개인필명의 글에서 "일본의 둘도 없는 동맹국인 미국 땅에 일제의 성 노예 죄행을 고발하는 비석이 연이어 세워지는 것은 과거 범죄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당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함. 노동신문은 "얼마 전 미국 동부에 위치한 뉴저지주의 한 도시에서 과거 일본군 성 노예 범죄와 관련한 비석을 세울 데 대한 문제가 결정됐다"며 "지금 이런 움직임은 워싱턴과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각 곳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함.
-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뉴저지주 버겐카운티가 위안부 기림비를 직접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지난 6월에는 미국 뉴욕주 낫소카운티 아이젠하워파크 내 베테랑스 메모리얼(현충원)에 위안부 기념비가 세워짐. 이날 노동신문의 보도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위안부 기림비 '말뚝테러' 사건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팰팍)에서 위안부 기림비 옆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일본 글씨로 쓰여있는 흰 말뚝이 발견돼 미국 당국과 미국 내 한 인사회를 경악하게 함.
- 노동신문은 아울러 일본 정부가 지난 5월1일 히로키 시게유키 뉴욕총영사 등을 팰팍에 보내 거액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위안부 기림비의 철거를 요구했다가 면전에서 거절당한 사실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부장관이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표현한 일도 거론하며 일본의 사죄를 촉구함.

● 日, 무인기 개발키로..2020년 실용화 목표(11/4, 연합뉴스)

-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한다는 명분으로 적외선 센서를 장착한 무인정찰기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함.
- 일본 방위성은 내년 예산 요구안에 무인기 시스템 연구비를 포함할 방침임. 4년간 30억 엔(40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임. 내년에 시험용 무인기의 기초 설계에 착수하고, 2020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에 실용화한다는 목표임.
- 무인기에 장착할 열 감지 적외선 센서는 거의 개발을 끝낸 것으로 알려짐. 방위성 간부는 "기술적인 기반은 갖춘 상태"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함.



-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한 이유는 북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해야 한다는 필요와 관련이 있음. 일본은 현재 지상에 배치한 레이더와 이지스함, 미군의 조기경계위성(SEW) 정보를 이용해 북한 미사일 동향을 파악하고 있음. 하지만 레이더 등은 미사일이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가기 전에는 탐지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음.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쏘았을 때에도 발사에 실패해 낮은 고도에서 낙하했기 때문에 조기 탐지에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반면 무인정찰기는 22시간 연속으로 고도 약 1만3천500m의 일본 근해 상공을 날며 낮은 고도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다. 무인기는 미국이 먼저 실용화했고, 중국도 올 9월 무인기 테스트를 끝낸 것으로 알려짐.

라. 기 타

● <내전' 시리아, 北에 대표단 보내 친분과시>(11/2, 연합뉴스)

- 치열한 내전으로 국내 상황이 극도로 불안정해진 시리아가 최근 북한에 경제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눈길을 끄.
- 2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시리아의 문화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경제대표단이 지난달 29일 평양에 도착함. 이들은 도착 당일 만수대언덕에 세워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에 헌화했고 다음날에는 만수대의사당을 찾아 북한 박의춘 외무상과 담화를 함.
- 같은 달 31일에는 주체사상탑도 참관했음. 조선중앙TV는 대표단이 "주체사상탑이 풍치가 좋은 대동강변에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깊은 감동 속에 돌아봤다"고 전함. 시리아가 내전이라는 비상상황에도 북한에 경제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그만큼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됨.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시리아에 각종 무기제조기술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리아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스킨드 D를 개발·제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음.
- 올해 들어서도 양측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서로 생일축전과 재난 위로문 등을 주고받는 등 각별한 친분을 과시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공군연합훈련 군산서 실시(10/31, 연합뉴스)

- 한미 공군의 연합 편대군 훈련(일명 '맥스선더')이 31일 전북 군산의 미공군 기지에서 열렸다. 특히 미공군 주도로 진행된 이날 훈련에는 내년 본격 투입에 앞서 시험평가 중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일명 '피스아이'가 모습을 드러내 관심을 끌었음.



- 이날 훈련은 적의 기습적인 공중 도발을 저지하고 적 지휘부를 포함한 핵심 표적을 무력화하는 등 한미 연합작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이날 훈련에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인 '피스아이'를 비롯 F-15K, KF-16, F-16CM 등 한미 공군 전투기 60여대가 참가함.
- 훈련은 적의 기습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가정 아래 적 지역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라는 명령이 하달되면서 시작됨. 아군 전투기 40여대는 이륙 즉시 적의 도발원점에 접근, 경로상에서 대기 중이던 적군과 도발 원점을 정밀 폭격한 후 빠르게 작전기지로 귀환하는 등 공격 전술을 완벽히 소화함. 아군으로 참가한 미 51전투비행단 80전투비행대대 소속 케이지 대위는 "이번 훈련을 통해 유사시 최고의 기량을 가진 한국 조종사와 함께 서로 신뢰하며 어떠한 임무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함. 이날 현장을 참관한 미 제7공군 사령관 잔막 조아스 중장은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력을 실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공군과 굳건한 협력을 통해 전쟁 억제력을 위한 공군력 증강에 힘쓰겠다"고 밝힘.

● <美대선과 한반도> 한미 '찰떡공조' 변화 맞나(11/4, 연합뉴스)

- 미국 대선과 한국 대선 이후 양국의 새로운 리더십이 동맹현안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주목됨. 미국의 버락 오바마·밋 롬니, 한국의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등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최종 짝을 이루느냐에 따라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인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과 공조 양태가 달라질 것으로 관측됨.
- 이명박 정부와 1기 오바마 정부 사이의 한미동맹은 양국의 핵심 인사들로부터 '찰떡 공조', '린치핀(linchpin, 수레나 자동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끼는 핀으로 핵심이라는 뜻)'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고함을 자랑함. 그러나 한미동맹의 공고함은 좋았지만 동북아 정세의 핵심 불안요소인 북한의 변화는 이끌지 못했음.
- 일단 한미 양국 대선 이후 북한 문제의 해법을 놓고 한미간에 긴장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임. 다만 누가 양국의 지도자로 등극하느냐에 따라 긴장의 수위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임. '전략적 인내'를 해온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은 연임에 성공할 경우 대북정책을 포함한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이 때문에 12월 있을 한국 대선 결과가 한미관계나 북미관계의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음.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가 승리할 경우 오바마 연임 때보다 한미관계가 더 긴장될 가능성이 있음. 롬니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해 '당근보다 채찍'에 상당히 무게를 두는 전략임. 롬니는 북한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깡패국가'라고 규정해 왔음. 반면 12월 한국 대선에 나서고 있는 3명의 우리 대선 후보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음. 따라서 당선 이후 남북관계 복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가능성이



- 큼. 이 점이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엇박자를 예고하는 대목임.
- 최근 방한한 미국 주요 인사들의 최대 관심사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임.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6자회담 미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최근 방한에서 각 대선후보 캠프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잇따라 접촉함.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증폭될 경우 한국은 양자 사이에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분석임.

나. 한·중 관계

● 韓中, 사회보험협정 정식 체결(10/29,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이 상대국 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과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13년간 면제하기로 합의함.
- 양국은 상대국에서 채용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금보험 강제 가입을 5년간 미뤄주기로 함. 아울러 한중 사회보험협정 발효 이전에 여행자보험을 비롯해 중국 내에서 통용되는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한국 근로자에 대해선 2014년 말까지 중국 의료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또 상대국 파견 공무원에 대해선 연금보험과 고용보험 이중 가입을 면제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선 연금보험 이중 가입을 영구 면제하기로 합의함.
- 한중 양국은 29일 오후 베이징(北京) 시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청사에서 이규형 주중 한국대사와 인웨이민(尹蔚民)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험협정에 정식 서명함. 중국이 양로보험(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공상(산재)보험, 실업보험, 생육(출산)보험 등 5개 보험의 가입을 규정한 사회보험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9월부터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를 강제하면서 한중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돼 왔음.
- 한중 사회보험협정은 오는 11월 한국 내에서 국회 비준 절차 이후 양국에서 동시 발효될 예정임. 대사관 관계자는 "한중 사회보험협정은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과 근로자의 불필요한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함. 그는 "협정 체결로 중국 내 한국 기업과 근로자는 연간 3천억 원, 중국인을 채용한 한국 기업은 연간 1천 500억 원의 사회보험료가 절감될 것"이라고 덧붙임. 그는 이어 "국제관례로 볼 때 파견근로자의 연금보험과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이 5년이지만 양국의 파견근로자들이 대부분 장기 체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그보다 2.5배 많은 13년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함.

● <韓中 학자, 통일·한미동맹 격론>(10/30,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30일 베이징(北京) 소재 트레이더스 호텔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한반도 통일과 한미동맹을 도마에 올려 격



론을 벌임.

- '한반도 통일과 한중 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이 세미나는 통일부 주최, 통일연구원 주관으로 열림. 한국 측에서 주재우 경희대 교수, 박종철 통일연구원 연구원, 유호열 고려대 교수가, 중국 측에선 주펑(朱鋒) 베이징대 교수, 조호길 중앙당교 교수, 위샤오화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이 발표자로 참석함. 또 전병곤·허문영 통일연구원 연구원, 장롄구이(張璉圭<王+鬼>) 중앙당교 교수, 스인홍(時朋弘) 인민대 교수, 장위산 지린사회과학원 교수,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한석희 연세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섬.
- 중국 측에선 먼저 한미동맹이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려는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중국을 겨누는 칼끝이 될 것이라면서 '안보딜레마'로 규정함. 한미 양국이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바탕으로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게 돼 결국 대만문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남중국해 분쟁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도 보임. 주펑 교수는 "중국으로선 한미동맹이 결국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 전략 참여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고도 지적함.
- 이런 중국의 시각은 한미동맹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한다는 것이란 게 한국 학자들의 견해임. 한국 학자들은 한미동맹이야말로 최근 몇 년 새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안보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작년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이은 김정은 지도체제의 등장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절실한 안보 사안이라고 강조함 박종철 연구원은 "통일된 한반도의 한미동맹은 지금과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중 관계에도 새로운 틀이 형성될 것"이라며 "미래가 불확실한 한미동맹 때문에 한중 간 한반도 통일 논의가 방해를 받아선 안 된다"고 역설함.
-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한 진솔한 대화도 이어졌다. 장롄구이 교수는 "중국·대만의 양안(兩岸) 관계가 호전돼 가는 반면 남북한 관계는 악화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의 미래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함. 장 교수는 아울러 "중국 내에서 북핵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한반도 통일이 당겨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핵무기를 보유한 통일 한반도를 우려하는 얘기도 나온다"고 소개함. 스인홍 인민대 교수는 "평화, 자주를 원칙으로 한반도 통일이 돼야 한다"는 지론을 펴. 스 교수는 근래 이명박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을 거론하면서 상대를 자극할 민감한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함. 주펑 교수는 "중국이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을 편다고 해서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주권국가이자 유엔 회원국으로서 보고 한반도 정책을 편다는 견해를 밝힘.

● 정부, 中에 NLL인근 불법조업 단속강화 촉구(10/31, 연합뉴스)

-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우리 정부가 중국에 촉구함.



- 외교통상부는 30일 주한 중국대사관에 구두 및 문서로 "NLL 인근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어민의 어구 훼손 등이 심각하다"면서 "중국 정부가 철저한 단속을 통해 이를 근절시켜달라"고 촉구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31일 전함. 외교부는 또 중국 측에 "NLL 인근에서의 불법조업 행위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함.
- 이에 대해 중국 대사관측은 "중앙·지방 정부 모두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강력한 지시를 하달하기도 했다"고 지속적인 계도·단속 방침을 밝힘.

● 양제츠 외교부장, 류우익 한국 통일장관 회견해(10/31, 인민일보)

- 외교부 소식통에 따르면, 2012년 10월 30일, 양제츠(楊潔篪) 외교부 부장은 전 주중 대사를 역임했던 류우익 통일부 장관과 회견함. 회견 자리에서, 양측은 양국관계와 공동 관심사안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눔.

다. 한·일 관계

● 한국 또 밀려..애플,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10/31, 연합뉴스)

- 애플이 자사의 지도에서 한국과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접속할 경우 독도를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명칭)'와 같이 표기기로 결정함.
- 정부 당국자는 31일 애플이 한국과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자사 지도에 접속할 경우 독도 지명을 '독도, 다케시마,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 등 3개 명칭으로 같이 표기하겠다는 방침을 알려왔다고 전함. 기업 이익 때문이라는 것이 애플의 설명이지만 애초에 독도로 단독표기됐던 지명에 다케시마가 병기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독도 홍보전에서 일본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음.
- 그러나 한국에서 접속했을 경우에는 독도로, 일본에서 접속할 때는 '다케시마'로만 각각 독도 명칭이 표기됨. 변경된 지명은 아이폰 등에서 사용되는 애플의 새 운영체제인 iOS6로 운영체제(골드마스터 최종버전)의 지도에 적용됨.
- 애플은 지난 7월 iOS6 시험판에서는 독도 명칭을 다케시마와 리앙쿠르암으로만 표기했다. 그러다가 우리 측의 항의로 지난달 19일 출시된 iOS6 골드마스터 버전에는 독도로만 표기(일본지역에서 접속한 경우는 제외)됨. 그러나 이번에 버전이 다시 업데이트 되면서 영어 등 제3국어 사용지역에서는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하는 것으로 최종 변경됨. 이 과정에서 일본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됨. 애플은 또 동해 지역은 지도에 아예 명칭을 표시하지 않았음.
- 정부 당국자는 "독도는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름을 존중해서 표기해야 한다고 애플 한국지사에게 항의했다"면서 "이번 애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계속 시정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함. 우리 정부



의 항의에 대해 애플 한국지사측은 "비즈니스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함. 앞서 구글도 자사 지도 업데이트를 통해 독도의 명칭을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변경했으며 독도의 한국 주소도 삭제한 바 있음.

● 뱃쇼 日대사 "한일관계 강화 희망"(11/1, 연합뉴스)

- 뱃쇼 고로(別所浩郎) 주한 일본대사는 1일 "앞으로 한일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밝힘. 뱃쇼 대사는 이날 오후 신임 인사차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방문, 안호영 외교통상부 1차관을 예방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함.
- 안 차관은 뱃쇼 대사가 일본 외무성에서 북동아과장, 외무심의관 등을 역임하는 등 한일관계에 이해가 깊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부임을 환영함. 또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함.
- 뱃쇼 대사도 재임 기간에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20분간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 독도·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짐. 지난달 30일 부임한 뱃쇼 대사는 안 차관과의 면담 전에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 한편 일본 지역 공관장 회의 참석차 방일한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 은 이날 오후 일본 외무성에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아시아태평양 주 국장과 면담함. 두 사람은 면담에서 양국 관계와 지역 정세에 대해 두루 의견을 교환함. 한 참석자는 "상견례를 겸한 자리여서 구체적인 현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함.

라. 미·중 관계

● 中, 티베트 정책 언급 美대사 비판(10/30,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티베트 정책 재고를 촉구한 게리 로크 주중 미국 대사를 비판함.
-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30일 "우리는 어떤 국가, 어떤 사람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 내정에 속하는 티베트 문제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힘.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의 티베트인 지역에서 발생한 분신 사건 대부분은 달라이 라마 세력이 기획, 선동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함.
- AFP통신에 따르면 로크 대사는 이날 미국에서 진행된 온라인 포럼에 출연,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티베트인 지역에서) 분신이 잇따른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의 티베트 정책 재고를 촉구함. 로크 대사는 이어 중국이 티베트인들의 종교와 문화, 언어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함. 로크 대사는 지난달 말 쓰촨성의 성도인 청두(成都)를 방문했다가 돌연 발걸음을 티베트인 거주지 아바(阿坝(土+霸))현으로 돌려 중국 당국을 불편하게 함, 로크 대사는 아바현에서 티베트인들을 두



루 만났고 티베트 불교 사찰도 방문함.

- 전체 인구 5만명 가운데 티베트인 비율이 90%가 넘는 아바현은 작년부 터 티베트인들의 시위성 분신 저항이 잇따르면서 티베트 독립운동의 중 심지로 부상한 곳임. 티베트(중국명 시짱(西藏))자치구와 인근 쓰촨· 간쑤성의 티베트인 거주 지역에서는 2009년부터 티베트인 50여명이 잇따라 분신을 기도, 이 가운데 상당수가 숨진 것으로 알려짐. 아울러 티베트자치구의 성도 라싸(拉薩)에서는 지난 2008년 대규모 유혈 시위 가 일어나 중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더라도 최소 21명이 숨졌음.

● 中, 美측 산업기밀 빼내려 했다..."사실무근" (11/1, 인민일보)

- 외교부 소식통에 따르면, 31일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연례브리 핑 자리에서, 철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 에서 중국이 미국에 사이버 공격을 가해 사이버상의 관련 자료를 빼냈 다고 한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밝힘.
- 미국 모 정보기관에서 중국과 무역거래를 하는 미국회사가 사이버 공격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고,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산 업기밀을 빼내려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음. 이에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홍대변인은 "중국은 여러 차례 중국 측의 입장을 명 확히 밝힌 바 있으며 중국은 철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에 사이버 공격을 가해 사이버상의 관련 자료를 빼냈다고 한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본다"고 말함. 그는 더불어 "사이버 안전문제는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문제이며 중국 역시도 해커공격을 당하는 주요 피해국가의 하나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실무적인 협력을 통해 사이버 안전을 공동으로 수호해 가길 바란다" 고 덧붙임.

● 외교부, 일본의 잘못 중미 양국이 막아야(11/2, 인민일보)

- 외교부 소식통에 따르면, 러위칭(樂玉成)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가 11 월 1일 제2회 '중미 안보관계 및 협력' 세미나에 참석하여 "중미 양국은 반파시즘 전쟁으로 인해 커다란 희생을 감수하고 더불어 크게 기여한 국가로서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 국내 우익단체의 세력을 억제해 일본 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고 아시아와 세계를 다시금 재 난에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힘.
- 러위칭 부장조리는 연설 가운데 "다음 단계는 중미관계에 대한 '쓰하오 (四好, 4가지 사항을 잘 이행하는 것)', 즉 양국관계를 긴밀히 하고, 모 순과 이견을 잘 제어하며, 신형대국관계를 유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 역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함.
- 닌자위다오 문제에 대해 러 부장조리는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일본 이 중국의 고유영토를 강탈했기 때문이며, 다른 모든 분쟁 또한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함. 러 부장조리는 또한, 최근 일본 우익단체가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난징대학살, '위안부' 강제 징용을 부인



하고, 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물론 군비확장을 부추키며, 평화헌법을 폐기하라는 발언과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말함. 아울러, 중미 양국은 반파시즘 전쟁으로 인해 커다란 희생을 감수하고 또 크게 기여한 국가로서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 국내 우익단체의 세력을 억제해 일본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고 아시아와 세계를 다시금 재난에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그리고 중국은 일본이 현 사태를 인식하고 반성하며, 환상을 접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잘못을 고쳐 중국의 영유권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지하길 촉구했다고 덧붙임.

마. 미·일 관계

● 日, 美 신형 수직이착륙기 도입론 부상(10/30,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내에서 미군의 신형 수송기인 수직이착륙기(MV22 오스프리)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음.
- 30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이달 중순 열린 외무성과 방위성 간부회의에서 외무성 측이 신형 수직이착륙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이 도입하는 것도 선택지"라는 견해를 밝힘. 이와 관련,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당장 수직이착륙기를 도입할 생각은 없다"고 즉시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밝힘. 그는 그러나 "일본의 안전보장에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완전히 길(수직이착륙기 도입)을 차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해 장기적인 도입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았음.
- 방위성은 수직이착륙기의 안전성 논란과 비용대비 효과, 그리고 주일미군의 수직이착륙기 배치에 따른 오키나와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조기 도입은 어렵다는 시각임. 방위성의 한 간부는 "신형 수직이착륙기를 1대 도입할 경우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여러 대를 도입할 경우 비용과 조종사 양성, 정비체제 구축 등에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함. 신형 수직이착륙기는 대당 100억 엔(약 1천370억 원) 정도임.
- 하지만, 외무성과 방위성 일각에서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도서지역 방위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자위대가 항공기 등을 조달하는 경우 5년 주기로 정부가 결정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수량과 규모 등을 명기하는 것이 원칙임. 2010년 12월에 정부가 결정한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는 신형 수직이착륙기 도입 계획이 포함되지 않음.

● 美日 '우주쓰레기 감시' 공조 추진(10/31, 연합뉴스)

- 미국이 주도하는 우주 쓰레기(위성 파편) 감시 강화 작업에 일본도 동참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31일 보도함.
- 일본 방위성은 2013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예산안에 항공자위대의 지상 레이더 FPS-5를 우주 쓰레기 감시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비 1억 엔을 계상할 방침임. 우선 기술적인 검증을 한 뒤 실용화 전망이 서면 우주 쓰레기 감시 임무에 투입할 계획임. 산케이신문은 중국이 2007년 1월 위성 파괴 실험으로 약 3천개의 우주쓰레기를 발생시켰다며 "미국과 일본이 우주에서도 대중 감시에 나섰다"고 풀이함.

-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임. 양국은 올 들어 외무·방위 당국의 심의관급 협의를 통해 우주의 안정적인 이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견 일치를 봤음.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도 지난 9월 방일시 기자회견에서 "우주에서 (미일) 협력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힘.
- CNN은 최근 미 공군이 약 35억 달러를 들여 지구 주변의 우주 쓰레기를 감시하는 이른바 '우주 펜스'를 증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함. 미국 방산업체인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이 새로 추가될 레이더 시스템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한 상태임. 미군은 이르면 올해 안에 선정 작업을 끝내고 2017년부터 운용을 시작할 계획임. 우주 쓰레기는 2만~2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작은 것은 야구공만 한 크기이고, 큰 것은 버스 크기만한 것도 있음.

● 주미日대사 "美, 다오위다오 문제서 절대중립 아냐"(11/1, 인민일보)

-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사사에 겐이치로(佐江賢一郎·61) 신임 주미 일본대사가 10월 30일 가진 인터뷰에서 "다오위다오(釣魚島) 국유화 추진은 최선의 선택이며, 미국정부의 이른바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절대 중립적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힘..
- 보도에 따르면, 사사에 대사는 도쿄도 섬 매입 계획에 지지를 표했고, 아울러 이는 다오위다오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함. 사사에 대사는 또 미국정부가 일본의 국유화 계획을 안 후에도 반대 입장을 표하지 않았고, 일본 측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으며, 미국은 다오위다오 문제를 '미일안보조약'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힘. 만약 무력적 위협 혹은 충돌이 발생한다면 미국도 이에 엄격히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 중립적 입장이 아니라고 말함. 또한 사사에 대사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정부와 (다오위다오 국유화에 대해) 대화를 진행했지만 설득하지 못했다"라고 전함.

● 오키나와 미군, 이번엔 민가 음주난동(11/2, 연합뉴스)

-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국 군인 한명이 술에 취해 민가에 난입한 뒤 10대 소년을 구타하는 등 난동을 일으킴. 같은 지역에서 주일 미군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벌어진 일임.
- 2일 오키나와현 가테나(嘉手納) 경찰서에 따르면 24세 남성인 이 군인은 전날 오후부터 같은 현의 요미탄(讀谷) 마을의 일본식 주점에서 술을 마심. 이 군인은 술에 취한 채 술집과 같은 건물 3층에 있던 민가로 난입했음. 그는 집에 있던 13세 소년을 마구 때리고 TV 등 가재도구를 부수기도 함. 이어 그는 3층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림. 술집 주인은 이날 새벽 1시경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 미군



은 땅에 쓰러져 있었음.

- 오키나와 미군에는 성폭행 사건의 여파로 지난달 중순부터 오후 11시와 다음날 오전 5시 사이의 외출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였음.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통금 시행 중에 벌어진 일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라며 "소년을 구타했다는 점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지지통신은 일본 외무성이 존 루스 주일 미국대사를 불러 이번 일을 항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이번 사건은 안전성 논란을 벗어나지 못한 미군 수직이착륙기가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배치된 이후 점증하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미감정을 더욱 키울 것으로 전망됨. 오키나와 기노완시(市)에 사는 가키노하나 다츠오(77)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군의 말이 걸치레였음을 알게 됐다"고 말함.

● 미국 병사 사건"야간외출금지령 나와 있는데, 지극히 유감"(11/2, 산케이신문)

- 오키나와현 요미탄 마을에서 미군 병사가 주거에 침입해 남자 중학생을 때린 사건에 대해서, 노다 요시히코 수상은 2일, 내각 기자회견의 인터뷰에서, "야간외출금지령이 나와 있는 상황아래서 일어난 일로 지극히 유감스럽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일어나 버렸다"라고 말함.
- 주일미군이 10월의 미국 병사에 의한 여성 폭행 사건을 이래로 전국의 주둔 미국 병사에게 야간외출금지령을 냈던 바로 직후. 후텐마 비행장 이전 계획이나 수직 이착륙 수송기 MV22의 후텐마 배치에 현지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병사에 의한 잇따르는 불상사에, 수상으로서도 강한 분노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보임.
- 키라주사 외무 부대신은 2일, 외무성에 주일미 대사를 불러 항의. 주일미 대사는"분노라는 말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다. 사건의 수사, 재발 방지에 대해 일본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한다"라고 응함.

바. 중·일 관계

● 주불 중국 대사가 영유권 주장, 르몽드지에 기고(11/1, 산케이신문)

-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31 일자 지면에서, 프랑스 주재의 중국 대사의 "조어섬(센카쿠 제도)을 영유 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며, 일본은 아니다"라고 제목으로 기고를 게재함.
- 그는 2001년부터 06년까지 중국 외무성의 보도 국장을 맡았으며 당시 도 코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을 비판하여 일중 관계가 악화됨. 그는 기자 회견에서 얼굴을 붉히며 격렬한 일본 비판을 전개함.
- 기고가 게재된 것은, 르몽드지의 의견란이었으며 중국대사는 18 세기나 19 세기의 프랑스의 지리학자가 제작한 지도에 센카쿠 제도가 중국령으로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영유권을 주장함.



● "中, 日에 센카쿠 공동관리 협의 요구"(11/2, 연합뉴스)

- 중국이 일본에 센카쿠(중국어명 댜오위다오) 해역 공동관리를 논의할 정기협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함. 이 통신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일본 측에 센카쿠가 영유권 분쟁지임을 인정하고 공동 관리를 논의할 정기협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함. 통신에 의하면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지난 9월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해 지구전과 외교전, 경제전을 전개하기로 방침을 정함.
- 중국 지도부는 이와 함께 대(對) 일본 공작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책임자로 차기 지도자에 내정된 시진핑 부주석을 지명함. 중국은 일본 정부에 센카쿠의 영유권 분쟁을 인정토록 한 뒤 ▲센카쿠 주변에서의 어업권 문제 ▲공동 관리해역 설정 ▲석유 및 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의 공동개발 등을 의제로 하는 정기협의를 제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짐. 중국은 지난달 11일 일본이 센카쿠를 국유화한 이후 지속적으로 센카쿠 해역에 해양감시선과 어업감시선을 진입시키는 한편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가하면서 영토 문제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하지만, 일본 정부는 센카쿠에 영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중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1일 중의원 대표 질의 답변에서 "센카쿠는 의심의 여지없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음.

● 中, 3개국 끌어들이 중국에 맞서려는 日... "헛된 수고"(11/2, 인민일보)

- 중국외교부 관영 홈페이지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연례브리핑에서 댜오위다오(釣魚島)는 예로부터 중국의 신성한 영토로 중국은 국가주권과 영토완정(領土完整)을 지켜낼 자신감 및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측이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 중국에 맞서려 하는 것은 헛된 수고라고 밝힘.
- 후지사키 이치로(佐佐江賢一郎) 주미 일본대사 후임자가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이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절대 중립적 입장이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미국 국무원 대변인은 미국은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에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고 밝힘. 중국은 일본과 미국 양국의 이 같은 발언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홍대변인은 "댜오위다오는 예로부터 중국의 신성한 영토로 중국은 국가주권과 영토완정(領土完整)을 지켜낼 자신감 및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측이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 중국에 맞서려 하는 것은 헛된 수고다"라고 답함.
- 더불어 중국 해양감시선이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일본 측 선박을 몰아냈다는 보도가 있는데, 본 순찰은 이미 정례화된 것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중국 해양감시선이 중국의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정례 순찰을



진행하며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무활동의 일환이다"라고 못박음.

● 中전략폭격기, 원거리 해상공격 훈련(11/3, 연합뉴스)

- 중국 전략 폭격기들이 원거리 해상 공격 훈련을 함. 3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 공군 모 항공사단 소속의 홍(轟)-6(H-6) 폭격기들은 최근 수천km 떨어진 해역의 상공으로 이동, 가장 적선을 모의 공격하는 훈련을 시행함. CCTV는 훈련 규모나 구체적인 훈련 장소 등은 밝히지 않음. 그러나 뉴스 화면에는 최소 8대의 H-6 항공기 모습과 편대를 지어 함께 비행하는 모습이 나타남.
- H-6 폭격기는 중국이 옛 소련의 TU-16를 도입, 자체 생산한 것으로 핵폭탄, 공대함·공대지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장착할 수 있음. H-6 편대는 수 시간 동안 비행해 훈련 지역에 도착함. 이어 가장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는 것을 피하려고 해상 100m 상공까지 내려가는 초저공 비행을 통해 목표물에 접근함.
- 이번 훈련은 내용에 비춰볼 때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중국은 일본이 센카쿠 국유화를 단행한 9월 11일부터 해감선(해양감시선)과 어정선(어업관리선)을 수시로 센카쿠 영해에 진입시켜 일본의 실효 지배를 무력화시키고 있음. 이런 가운데 중국은 지난달 19일에는 센카쿠 해역에서 중국 관공선이 일본 순시선과 충돌한 상황을 가정해 군함과 해감선, 어정선 등 11척의 함정과 전투기, 헬리콥터 등 항공기 8대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시행하는 등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시위도 병행하고 있음.

사. 기 타

● 대만서 '中 스파이' 사건 또 발생(10/29, 연합뉴스)

- 대만 퇴역 해군 장교가 기밀 정보를 중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로 체포됨. 대만 국방부는 군 검찰이 해군 모 전투 부대의 지휘관을 지낸 장(張) 씨 성의 전(前) 영관급 인사를 간첩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힘. 당국은 이 인사가 지휘관으로 근무 시절 중국 정보 요원이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함.
- 그러나 구체적인 혐의와 유출된 정보 내용, 연루된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빈과일보는 이와 관련, 잠수함 동선을 담은 해도와 유사시 작전 계획 등이 유출 정보에 포함됐다고 보도함. 신문은 이번 간첩 사건에 모두 8명의 군 당국자가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함.
- 대만에서는 지난해 1월 미인계와 뇌물에 넘어가 중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펼친 례(羅賢哲·52) 국방부 육군사령부 전 통신전자정보처장(소장급)이 구속된 바 있음. 국방부는 "군 당국이 상황을 장악해 조사하고 있으며, 핵심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힘.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